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과 대남한 전략

차문석

김일성 사후 북한은 ‘고난의 행군’이라는 체제의 총체적 시련 속에서 1998년에 김정일 정권의 출범과 동시에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전진적인 슬로건을 내놓았다. 이 시기에는 ‘선군 정치’라는 용어가 공식 문헌에 등장하면서 군중심의 위기관리 체제의 가동을 알렸다. 김정일 정권의 강성대국 노선은 일종의 김정일식 국가비전으로서 고난의 행군이라는 위기 상태에 있던 사회에 ‘희망’을 불어넣어 인민들을 통제하고 동원하려는 통치 담론이다. 정치사상 강국, 군사 강국, 경제 강국이라는 3대 강국의 성취를 목표로 하는 강성대국은 2012년을 목표년으로 삼고 있다.

1998년 이래 강성대국 건설노선은 각종의 노선들과 담론들을 흡수하면서 진화해 왔는데, 1998-99년에 새로운 천리마 대진군, 2000-2001년에 3대 기동론(사상 중시, 총대 중시, 과학기술 중시), 2002년에는 4대 제일주의(수령, 사상, 군대, 제도 제일주의)를 흡수하였다. 그 이후 북한에서 4대 제일주의는 강성대국 건설을 표상하는 ‘영원한 구호’로서 자리매김 되었다.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과정에서 ‘민족끼리’노선에 입각하여 대남한 전략을 구사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를 ‘민족끼리 패러다임’이라 명명하여 분석하였다. 북한의 대남전략 패러다임이 기도 한 ‘민족끼리 패러다임’의 목표는 ‘민족끼리’라는 담론을 강제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그리고 국제 사회와 남한 사이를 분리시켜 남한을 고립시키고 북한이 남북관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는 한편, 민족지향적이게 된 남한을 이용(햇볕정책 실시를 강제)하여 최대한의 경제적 정치적 이득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북한의 이러한 노선이 김영삼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의 남한에 대해서 어떻게 추구하고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는 어떠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 주제어: 고난의 행군, 강성대국, 4대 제일주의, 민족끼리 패러다임, 대남 전략

I. 서론: 강성대국의 좌표

1998년은 북한의 21세기 정치지형의 형성에서 매우 중요한 해이다. 1998년에 북한에서 이루어진 대표적인 정치적 이벤트를 거론한다면, 북한의 21

세기 주체사상이라 일컬어지는 ‘선군정치’가 5월에 공식문헌에 처음 등장했으며,¹⁾ 7월에는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가 이루어졌다. 9월에는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되고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김정일은 국방위원장에 재추대되었고, 10월에는 조선로동당 총비서에 추대되었다.

한편, 1998년에는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이 여전히 온 사회를 강하게 몰아부치고 있었으며 북한은 1998년을 ‘사회주의 강행군의 해’로 규정했다. 이때 남한에서는 햇볕정책을 대북 정책의 기조로 하는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고 있었다. 이 1998년부터 북한은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²⁾을 국가 목표로 내세웠으며, 이후 10여년 이상 사회에 이를 강요해 왔다. 나아가 북한은 2008년 신년사에서 김일성 전 주석이 태어난 지 100회가 되는 2012년을 북한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여는 해로 설정하였다. 여하튼 강성대국 건설은 제도적인 의미에서 김정일 체제의 등장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³⁾

‘강성대국’, 이는 북한에서 김정일 시대가 각종 스펙터클(spectacle: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 외부 세계의 시선과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을 통해서 사회에 그리고 외부에 제출하고 있는 일종의 국가 비전(vision)이다. 이 강성대국 비전은 고난의 행군으로 상징되는 생존-위협 상태에 함몰되어 있는 사회에 새로운 ‘희망’으로 제시되어 인민들을 통제하고 동원하고, 그리고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할 수 있는 태도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나타난 정치 노선이자 통치 담론이다.

1990년대에 들어와 북한의 체제는 개번 맥코맥(G. McCormack)이 사용하는 은유적 용어를 빌어서 표현하자면,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 시대의 국가에서 네안데르탈(Neanderthal) 국가로 급속하게 퇴행하던 중이었다.⁴⁾ 그

1) 북한은 선군정치의 시작을 “1995년 1월 1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다박술 초소를 찾으신 날은 이 땅위에 선군정치의 첫 포성이 울린 역사의 날”(『로동신문』, 2000.11.18)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공식문헌에는 5월부터 나타난다. 『로동신문』, 1998.05.26.

2) 효율적 독해를 위해서 강성대국의 정의를 먼저 소개한다. 북한이 정의하는 강성대국은 “국력이 강하고 모든 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럽없이 사는 나라”이다. 윤현철, 『“고난의 행군”을 락원의 행군으로』(평양: 평양출판사, 2002).

3) 1998년 7월 26일 최고인민회의의 제10기 대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이는 김정일 체제를 출범시키기 위한 준비작업이었다. 그리고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 권력구조를 개편하면서 공식적인 김정일 체제로 나아간다. ‘강성대국론’은 이러한 과정의 산물이다.

하지만 1997년 10월 8일 김정일이 당총비서에 추대된 것을 계기로 북한의 최고 권력에 대한 제도적 권력승계가 사실상 이루어졌다고 보는 시각도 다수 존재한다. 고유환, “북한의 권력구조 개편과 김정일정권의 발전전략”, 『국제정치논총』 제38집 3호, 1998년 8월.

러한 퇴행 과정은 현재 국내외 학계와 언론계의 일부에서의 정상화 평가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형이다.

따라서 그러한 퇴행 과정의 가장 깊숙한 저점(低点)이었던 1998년에 제출한 '강성대국'의 건설 노선은 그 용어가 본래적으로 의미하는 '강盛大(强盛大)한 국(國)을 건설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그 네안데르탈적 위기 상황이 완전한 체제 붕괴로 이어지는 사태를 막기 위해 과도기적으로 설립되었던 위기관리체제(이른바 선군 체제)로부터 벗어나 '안정성 있는'(정확하게 말하자면 불안정하지 않은) 국가 형태의 건설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과도적 형태의 체제로부터 '정상 국가'로의 발돋움하려는 전략이라고 단순화할 수 있다. 북한에게 2012년은 그러한 체제의 확고한 수립을 목표로 하는 시기이며, 그에 필요한 하부 체제도 응집성을 갖추고 완결되는 시기로서 결정되었다.⁵⁾

이 글은 지난 10여 년 동안 북한이 다양한 양식과 표현으로 제기해 왔던 '강성대국 건설'의 여러 측면들을 시기별로 그리고 영역별로 고찰해 보고, 그러한 강성대국 건설 노선에 기반한 북한의 외부 전략과 전술, 그 중에서도 특히 대남한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강성대국 건설 노선과 대남한 전략이 인과 관계, 혹은 적어도 상관관계로 연계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부터 시작해서 현재의 북한의 대남전략의 기초까지 살펴 볼 것이다.

4) 개빈 맥코맥, 『범죄국가, 북한, 그리고 미국』(서울: 이카루스미디어, 2006). 이 책에서의 표현은 “북한은 ‘현생국가’들 사이의 ‘네안데르탈 국가’라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46쪽.

5) 강성대국 건설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이 있다. 여기서는 기존의 몇몇 입장만을 소개한다. 김창희에 따르면, 김정일 시대의 새로운 국가관리정책으로 제기한 강성대국 건설은 기존의 전통적인 이데올로기의 강화를 토대로 현재의 선군영도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국가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전략으로 본다. 김근식과 이무철에 따르면, 강성대국론은 1990년대 위기 상황에서 체제수호 성격보다는 위기 타개 이후 새로운 긍정적 목표를 설정하고자 하는 담론으로 간주했다. 즉 강성대국론은 권력 승계 이후 새로운 희망적 동원구호로 제시됨으로써 체제안정과 사회 통합을 꾀하고자 한 것이라는 것이다. 고유환에 따르면, 강성대국 건설 노선은 김정일 정권의 자력갱생 방식인데, 이는 북한의 1950년대식의 발전전략이 다시 제기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유환, “50년대식 발전전략으로 난관돌파 시도”, 『통일한국』1998.11; 김창희, “김정일 체제의 국가관리정책과 발전전략”, 『한국동북아논총』제20집(2001); 김근식·이무철, “북한의 선군 정치와 강성대국론: 자료 해제와 연구 동향”, 『통일문제연구』제48호, 2007년 등을 참조하라.

II. 강성대국 건설 노선의 ‘진화’ 혹은 ‘변화’

북한은 1998년 8월에 『로동신문』을 통해서 강성대국 건설이 김정일의 사회주의 건설 노선임을 천명한 이후 매년 강성대국 건설의 ‘진화’ 혹은 ‘변화’ 과정을 언급해 왔다. 이하에서 주로 신년사설을 중심으로 하여 강성대국의 변화 과정을 시간적 흐름 속에서 강조점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도표로 처리했다.⁶⁾

북한의 1990년대 상황(고난의 행군 시기의 경제의 전반적 난파와 대기근)을 고려해 볼 때, 1998년에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을 철저히 내부용으로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는 고난의 행군 시기였고, 그 위에도 1998년에

〈표 1〉 강성대국의 변화 과정

연도	강성대국과 관련된 구호들
1999	강성대국 건설에서 위대한 전환이 일어난 역사의 해
2000	강성대국 건설에서 결정적 전진을 이룩해 나가는 총진격의 해
2001	강성대국 건설의 진격로가 열린 역사의 해
2002	강성대국 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이 이룩된 전변의 해
2003	강성대국 건설의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해
2004	강성대국에서 새로운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놓은 보람찬 투쟁의 해
2005	강성대국 건설연대기에 위대한 전환의 해
2006	강성대국의 여명이 밝아온 위대한 승리의 해, 격동의 해, 강성대국 건설에서 전환적 국면이 열린 금지 높은 해
	1차 북핵 실험(강성대국 논리의 진화과정에서 결정점으로 기능)
2007	부강조국 건설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된 자랑스러운 승리의 해
2008 ⁷⁾	김일성 탄생 100주년이 되는 2012년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로 상정하고 새로운 비약을 추진(이른바“2012년 구상”)
	2008년 12월에 천리마제강에서“12월 호소”로 다시 강조
2009	2009년은 강성대국의 기반을 마련한 해
	2차 북핵 실험(군사강국의 성취이자 강성대국의 기반)
2010	강성대국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첨단을 돌파하며 더 높고, 더 빨리 비약하자

출처 및 주: 각 년도의 신년사와 공동사설, 조선중앙통신 및 당해연도의 핵심구호를 중심으로 필자가 나름대로의 기준에 의해 정리했음.

6) 강성대국과 관련된 구호들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도표로 작성한 이유는 이하에서 진행하게 될 논의를 좀 더 질서 정연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다.

7) “2012년 구상”과 “12월 호소”에 대해서는 “현지도 강행군의 진실: 상”, 『조선신보』, 2009. 09.24를 참조할 것.

사회주의 강행군이 다시 덧칠되어 사회에 강요되는 시기였다.

그리고 1999년부터 2009년까지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의 논리는 지금까지 마치 살아 움직이는 생물처럼 시간의 경과와 함께 다양한 '논리'들과 '구호'들을 흡입하면서 점차 자가 성장, 자가 개발, 그리고 자가 진화를 거쳐 왔다. 그러한 과정에서 강성대국 건설 노선은 다양한 하위 체계(정치사상, 경제, 군사, 대외 전략 등)를 갖춘 노선과 비전으로 성장해 왔다. 이하에서는 강성대국 담론의 등장에서부터 그것의 성장과 체계화 과정을 살펴본다.

1. 강성대국 담론의 등장과 내용

북한은 1998년 1월 29-30일에 개최된 “전국자력갱생모범일군대회”에서 ‘고난의 행군’을 공식적으로 마감하고 혁명과 건설에서의 당면 목표를 ‘주체의 강성대국’ 건설에 있음을 공식적으로 천명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제출되게 된 것은 김정일 체제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는 시기인 1998년 8월 22일 『로동신문』 정론을 통해서였다. 거기서 강성대국이란, “착취와 억압, 가난과 무지, 침략과 약탈, 지배와 예측으로 얼룩진 지난 시대의 반동적, 반인륜적 국가건설사에 종지부를 찍고 인민의 자주적 요구, 인류의 념원을 전면적으로 꽃피워주는 영원한 리상국”이라고 정리하였다.⁸⁾

그리고 1995년 1월 1일부터 제기된 선군정치 노선에 따라 강성대국과 군대의 관계도 정리가 되었다. 즉 “사상과 군대를 틀어쥐면 주체의 강성대국 건설에서 근본을 틀어쥔 것으로 된다”고 하여, 강성대국 건설의 기본이 사상과 군대임을 밝히고 있다. “사상의 강국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여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튼튼히 세우고 그 위력으로 경제건설의 눈부신 비약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 장군님의 주체적인 강성대국 건설방식”이라고 한 것이다.⁹⁾

『로동신문』(1998.8.22)에 따르면, 강성대국은 정치·사상 강국, 군사 강국, 경제 강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적으로 사상 강국과 군사 강국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경제 강국화로 나아간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실 이것은 1996년의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우리식 사회주의 3대 진지론’이 1998년에 정식화된 강성대국론으로 발전된 것이다. 3대 진지론은 정치사상적 진지, 군사적

8) 『로동신문』1998.08.22

9) 『로동신문』1998.08.22

진지, 경제적 진지의 3대 진지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것이 각각 정치사상 강국, 군사 강국, 경제 강국으로 계승되어 갔다고 볼 수 있다.

다시 강성대국으로 돌아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치사상 강국’은 정치보다 사상을 강조하여 사상 강국이라 하는데, 온 사회가 하나의 사상, 수령의 사상으로 통일되어 사상의 위력으로 존재하고 발전하는 나라, 위대한 지도사상으로 시대의 발전을 선도하는 나라이다.¹⁰⁾ 정치사상 강국은 “수령결사 옹위”정신을 핵심점 이념으로 삼고 있으며, “반미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는 토대가 된다.

군사 강국은 어떠한 제국주의자들의 무력침공도 일격에 타승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강대한 군사력을 가진 무적 필승의 나라이다. 군사 강국은 조선인민군 “군사강국의 제일기둥이며 수령옹위의 결사대”로 간주하였다.

경제 강국은 자립적 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 위에서 끊임없이 발전하는 나라이며 민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물질생활을 원만히 보장하고 세계적으로 가장 발전된 나라들과도 당당히 겨룰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진 나라로 정의한다. 그리고 “경제건설은 강성대국 건설의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자리 매김하였다.

2. 강성대국 건설과 새로운 천리마 대진군

강성대국 건설을 내세우기 직전에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기본노선을 견지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강조는 1998년의 신년사설에서 이루어졌다. 그 직후 김정일은 경제부문 현지도도를 시작하였는데, 이는 김정일이 경제를 직접 관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리는 시그널로 볼 수 있다.

1998년 3월 9일 김정일은 함경북도 김책시에 위치한 성진제강 연합기업소를 현지 지도하고 성진제강이 “새로운 천리마 대진군”의 선봉에 설 것을 주문하였다. “수령님의 령도 따라 빈터 우에서 천리마대진군으로 자주·자립·자위의 사회주의 조국을 일떠세운 것처럼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령도따라

10) 정치 강국은 ‘영도자의 주위에 전체 민중이 철석같이 일심단결된 튼튼한 정치적 역량에 의거해서 철저한 자주정치를 실시하는 나라’라고 주장한다. 황호, “절세위인의 영도로 빛나는 사회주의 강성대국”, 2008.09.05.

제2의 천리마 대진군을 다그쳐 나가야 한다”고 하여 제2의 천리마 운동이 개시된 것이다. 이것은 계보학적으로 보았을 때, 고난의 행군→사회주의 강행군→천리마 대진군으로 이어지는 노선이라고 볼 수 있겠다.

여기에서는 “수령절대숭배의 정신, 결사관철의 정신, 자력갱신, 간고분투의 정신”이 강조되었고, “로동계급이 다시 한 번 천리마를 탄 기세로 대고조의 선봉에 설 것”을 호소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천리마 속도·강행군 속도를 창조할 것”을 역설하였다. 이러한 제2의 천리마 대진군이 ‘강성대국 건설’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1998년 8월이다. 이 이후에 제2 천리마 대진군은 강성대국 건설론 속으로 유기적으로 결합하게 된다. 결국 강성대국 건설 노선이 천리마 대진군 노선을 흡입하여 내적 논리를 강화하면서 자가진화(進化)한 것이다.

1999년의 핵심 표어는 “올해를 강성대국 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였으며, “주체의 강성대국 건설은 위대한 애국애족의 위업”이며 강성대국은 “주체의 사회주의 나라”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어서 2000년의 신년사설은 “당창건 55돐을 맞는 올해를 천리마 대고조의 불길 속에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라는 제목으로 천리마 대고조를 강조하였다.

하지만 2000년에 특이한 것은 강성대국 건설노선에서 일종의 체계화를 한층 더 갖추는 시도가 병행되었다는 점이다. 이른바 ‘강성대국 건설의 3대 기둥’을 제창했던 것이다. “우리는 사상 중시, 총대 중시, 과학기술 중시 로선을 틀어쥐고 올해 총진군을 다그쳐 나가야 한다. 사상과 총대, 과학기술은 강성대국 건설의 3대 기둥이다. 사상이 견결하고 총대가 위력하며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그것이 곧 주체사회주의 강성대국이다”¹¹⁾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리고 2000년에는 ‘선군정치’의 구호가 병존하였지만, 경제 재건에서 당의 역할이 매우 강조되었다. 가령, 강성대국론과 결부시킬 때 1999년에는 ‘강성대국론 + 선군혁명영도론’이었지만, 2000년에는 ‘강성대국론 + 당의 영도론’으로 미묘하게 변화되었다. 2001년 신년사설은 고난의 행군에서 승리했음을 밝히고 승리한 기세로 새 세기의 진격로를 열어나갈 것을 주문하면서 당의 영도를 강조했다. “2001년은 위대한 당의 영도 따라 21세기 강성대국 건설의 활로를 열어나가야 할 새로운 진격의 해, 거창한 전변의 해이

11) 『로동신문』, 2000.01.01.

다”¹²⁾라고 하였다.

이는 현재의 고통을 이겨내자는 한 차원 더 진행된 담론인데, “고난의 천리가 가면 행복의 만리가 온다. 이것이 1990년대 사회주의 수호전에서 우리가 찾은 투쟁의 고귀한 진리이다. 우리는 누구나 오늘을 위한 오늘이 아니라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사는 인생관을 가져야 한다”¹³⁾고 했다.

요컨대, 1998-2001년에 강성대국 건설 노선은 자체 진화를 했다. 먼저, 1998-99년의 시기에 강성대국 건설 노선은 그에 앞서 발기되었던 제2 천리마 대진군의 운동 에너지를 흡입하여 내적 논리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2000-2001년에는 사상 중시, 총대 중시, 과학기술 중시 로선(이른바 3대 기둥)을 새로이 장착함으로써 새로이 진화하게 되었다.

3. 강성대국 건설과 4대 제일주의

2002년에도 강성대국 건설은 계속 강조되었다. 2002년 신년사에서는 “위대한 수령님 탄생 90돐을 맞는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해로 빛내이자”고 주장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몹시도 비관적이었다. “제2, 제3의 고난의 행군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의지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는 매우 비장한 각오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2002년부터 강성대국 건설 노선에 변화가 발생하였다. 2002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4대 제일주의를 제창하였던 것이다. 이 시기 강성대국 건설 노선은 4대 제일주의를 다시 내적 논리로 흡입하여 진화하였다. 그리하여 “4대 제일주의는 강성대국 건설의 영원한 구호!”라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차원을 도입하였다. 4대 제일주의는 ‘수령 제일주의’, ‘사상 제일주의’, ‘군대 제일주의’, ‘제도 제일주의’라는 4가지 제일주의를 통해서 북한이 직면한 고난을 극복할 것이라는 것이다.

먼저 ‘우리 수령 제일주의’는 ‘김정일 동지를 절대적으로 믿고 이 세상 끝까지 따르자’는 것으로 정의되었으며, 이는 암울한 사태로 인한 아래로부터의 저항을 예방적으로 봉쇄하고 김정일에 대한 대안적인 담론이나 판단을 허용치 않도록 수령에 대한 충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었다.

12) 『로동신문』, 2001.01.01.

13) 『로동신문』, 2001.01.09.

둘째, '우리 사상 제일주의'는 '주체사상을 높이 들고 우리의 노선과 원칙을 추호도 양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며,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고 애국가, 진정한 민족주의자가 될 것을 주문하였다. 이는 민족적 담론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외부로부터의 도전적 상황을 내부 문제와 연결되지 않도록 단두리 하자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셋째, '우리 군대 제일주의'는 '선군정치에 요구에 맞게 혁명과 건설의 모든 면에서 군대가 사회의 본보기가 되고 인민의 거울이 될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 무너진 사회 전반의 질서를 군대를 통해서 재구축하려는 작업을 계속하기 위한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제도 제일주의'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옹호 고수하여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다그치'려는 것이었다. 이는 북한 외부에서 간헐적으로 제기되었던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에 대한 역방향의 대응이라고 볼 수 있으며 체제의 수정과 변화 가능성에 대한 최대한의 부정의 성격을 갖는 담론이다.¹⁴⁾

결국, 2002년 이후부터 강성대국 건설 노선은 4대 제일주의까지 흡입하여 진화하였는데, 그 이후 북한에서 4대 제일주의는 강성대국 건설을 표상하는 '영원한 구호'로서 자리매김 되게 된다.¹⁵⁾

4. 강성대국 건설의 현재: 북한의 인식

현재 북한에서 강성대국의 시간표는 어떻게 짜여져 있는가. 그리고 그 시간표에 따르면 북한에서 강성대국의 시간은 몇 시를 가리키고 있는가. 2007년에 이에 대하여 김정일이 중요한 언급을 하였다. 김정일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강성대국의 려명이 밝아오고 있다"¹⁶⁾고 언급하였고 북한이 강성대국의 여명기와 개시기에 들어갔음을 밝히고 있다.

14) 이상 4대제일주의에 대한 북한측의 정의는 윤현철, 『"고난의 행군"을 락원의 행군으로』(평양: 평양출판사, 2002), 159-196쪽에서 정리.

15) 『조선문학』2002년 3월호; 김원삼, 최순옥, 『4대제일주의는 강성대국 건설의 영원한 구호』(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4); 강성, 『4대제일주의: 사회주의 조선의 기상, 21세기 강성대국건설의 영원한 구호』(평양: 평양출판사, 2004) 등이 대표적이다.

16) 『로동신문』, 2007.05.24.

* 2009년 발표

고난의 행군 시기	1995 ~ 2000년
강성대국 여명기	2001 ~ 2006년
강성대국 개시기	2007 ~ 2012년

출처: 위의 표는 김병로, 2009.09. 해외학술회의보고서의 내용을 필자가 재구성.

주: 해외학술회의에 참가한 북한측 학자들이 자신들의 강성대국건설을 시기별로 분류한 것. 2006년 조선신보에서는 고난의 행군 시기를 1995-98년까지로 상정했는데 2009년에는 1995-2000년으로 늘려서 구분하였음.

위에 작성한 시간표에서 강성대국 여명기와 개시기 사이의 결절점은 바로 2006년 10월의 제1차 북핵 실험이다. 북한의 핵 실험은 북한의 핵 보유의 토대로서 강성대국의 구성요소 중 군사 강국의 요건을 충족하는 과정이었다고 본다.

북한은 현재 이미 주체사상으로 전민이 무장되어 지도자, 당, 군대, 대중이 일심 단결된 ‘사상의 강국’, ‘정치적 강국’을 이룩했다고 간주하였다. 그리고 전인민이 무장을 한 전민의 군대화와 군대와 민중이 하나가 된 ‘군민 일치’를 이룩하여 ‘군사 강국’도 이룩되었다고 현 시기를 평가하고 있다. 거기다 이미 두 차례 핵실험을 하여 성공하였고 이미 핵무기를 만들어 낸 핵보유 국가로 된 지금 이제 더 이상 어떤 제국주의 연합세력이나 反변혁세력들이 침략할 수 없게 되었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러한 ‘사상 강국’, ‘정치 강국’, ‘군사 강국’을 이룩한 바탕 위에서 이제 더 이상 국가 안보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자신을 가지고 경제건설에 매진하여 김일성 탄생 100돌이 되는 2012년에는 ‘경제 강국’까지 이룩하여 북한을 실제로 ‘주체 사회주의 강성대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2012년 구상”이다. 김정일은 2008년 12월에 평안남도의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면서 또 한 번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자고 강조하였는데, 이를 “12월 호소”라고 명명하여 전국에 회자시켰다.¹⁷⁾ 또한 2009년에는 2차 북핵 실험으로 강성대국의 기반이 마련된 해로 평가하였으며, 2010년은 강성대국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침단을 돌파하여 더 높고, 더 빨

17) “현지지도 강행군의 진실: 상”, 『조선신보』, 2009.09.24.

리 비약할 것을 주문하였다.

Ⅲ. 강성대국과 대남한 전략의 관계: '민족끼리 패러다임'의 실행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과 대남한 노선 및 전략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존재하고 있는가. 이 문제 제기는 양자 사이에 과연 인과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먼저 전환시켜야 한다. 확실히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 노선에는 남한에 관련된 논의는 들어 있지 않다. 하지만 강성대국 건설이 외부, 특히 남한과 하등의 상관이 없는 절대적 진공 상태에서 진행되어 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자 사이에 인과 관계까지는 아니지만 관련성(연관 관계)의 문제로 전환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다른 하나의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다. 강성대국 건설을 견고 있는 북한에게 가장 이상적인 남한은 어떤 존재여야 되는가. 이 문제를 던지는 이유는 이에 대한 답변을 출발점으로 삼아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과 관련된 대남한 노선 및 전략을 탐구해 들어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 한 마디로 대답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끼리 패러다임'¹⁸⁾에 남한이 정확하게 들어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민족끼리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남한이 그 패러다임에 정확히 들어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¹⁹⁾

첫째, 어떤 이슈든지 남한은 북한이 제안하고 허용하는 의제에만 묶여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이슈에 대해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통제해야 한다. 예를 들면, 2008년의 12.1조치(남북교류 협력과 인원 통

18) 북한은 항상 남한에 대해 '민족끼리'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다. 이 글에서는 '민족끼리'라는 북한의 용어에 남한을 향한 많은 이미지들이 들어 있으며, 그 이미지들은 북한이 자신의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상상하는 남한의 모습을 구성하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관계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이러한 것을 북한이 남한을 상상하는 하나의 인식 틀로 보아 '패러다임'(paradigm)이라 명명했다. 그리고 일단 양자를 합하여 "민족끼리 패러다임"이라고 명명했다. 이 논문에서만 사용하려고 만든 과도기적 표현이다.

19) 이것은 필자가 임의적으로 만들어낸 '민족끼리 패러다임'이라는 용어에 따라, 필자가 임의적으로 설정한 네 가지 의미들이다. 북한이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아니라는 것을 미리 밝힌다.

행 제한, 육로 통행 시간대와 인원수 축소, 개성공단 상주인원 감축, 철도은행과 개성관광 중단, 경협사무소 폐쇄 등)의 일방적 통보와 일방적 해제 통보, 남북한 정치군사합의의 일방적 무효화 통보 등이 그것이다.

둘째, 민족끼리 문제는 국제 문제로 전환시켜서는 안 된다. 역으로 국제적 문제에 대해서 남한은 북한에 제기해서는 안 되며 침묵해야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한 관련 이슈들에 대해서 남한은 침묵해야 한다. 가령, 남한은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아야 하며(미국 vs 전조선의 문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해서는 안 된다.

셋째, 어떤 상황 하에서도 남한은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국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남한은 같은 민족으로서 대북한 인도적 지원뿐 아니라 경제협력을 통한 경제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 이 부분에서는 다소간 강성대국 건설과 관련된 대남한 인식 논리가 북한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군사 강국으로서의 북한의 존재는 남한에게 안전과 안정(safety and security)을 제공하기 때문에 남한은 이에 보답해야 한다는 인식 논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넷째, 남한은 같은 민족으로서 북한이 추구하는 모든 대외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네 가지 요소는 북한이 대면하고 있는 어떠한 대내외적 환경에서도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남한의 이미지이다. 하지만 이 이상적인 남한의 이미지는 북한의 의지대로 관철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의회 민주주의 체제인 남한 정부의 성격(여야당 구조와 5년 주기의 정권 교체)과 각 정부의 대북 정책의 변화, 그리고 북미 관계에 또 하나의 변수가 되는 한미 관계 등의 요소들이 북한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남한의 이미지가 현실에서 관철되는 것을 구조적으로 방해하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의 남한에 대한 인식론에는 남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그 기반에 존재하고 있기도 하다. 최근 북한 측을 두둔하는 논리들을 보면, “북한의 경제 강국 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지만, 한국의 모습은 강성대국 건설로 달려가는 북한과 너무나 대비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은 “북한만의 강성대국이 아니다. 우리 민족의

강성대국 건설. 북한의 사회주의적 강성대국과 한국의 자주적 민주정부의 통일은 통일강성대국이라는 우리 민족의 새로운 전성기를 약속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결국 “남조선 인민들은 장군님(김정일)의 은덕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결론 짓기도 한다.²⁰⁾

하지만, 북한의 강성대국 논리에는 간과해서는 안 될 커다란 이율배반이 존재하고 있다.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은 우리 식, 자력갱생으로”²¹⁾라고 외쳐 왔으며, 특히 강성대국 건설은 외국 자본과 외국 기술을 끌어드리는 방법이 아니라 북한 자체가 갖고 있는 자원과 원료, 자체의 기술과 노동력으로 건설하는 ‘자력갱생의 방법’을 택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²²⁾ 즉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 노선에서 1950년대식 자력갱생을 그 논리적 경험적 토대로 삼고 있는 것이다.²³⁾

그러나 실제로 강성대국 건설을 진행하고 있는 북한은 2010년 현재 남한, 미국,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외부로부터 경제 지원을 얻어 내기 위해 총력적 투쟁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실이 강성대국 건설 노선과 이율배반을 낳고 있으며, 이러한 이율배반이야말로 왜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 노선이 자력갱생과는 달리 실제로는 외부와의 관계를 상정하지 않으면 성취할 수 없는 과제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

이러한 이율배반은 나아가 강성대국에 대한 남한의 지원이라는 논리를 낳기도 한다. 위에서 언급한 세 번째 요소(대북한 경제지원 국가로서의 남한)가 작동하는 논리이다. 강성대국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북측 입장 중에는 ‘북한이 핵보유국으로서 같은 민족인 남한을 지켜주는 대가로 남한이 북한에 지불해야 할 것이 있다’는 입장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북한 측이 오히려 확인하게 해 주었는데, 2006년에 미사일 발

20) 인용문은 황호, “절세위인의 영도로 빛나는 사회주의 강성대국”(2008.09.05)에서 정리.

21) 북한은 “한때 이남과 서방의 일부에서는 이북의 강성대국건설전략을 놓고 그 무슨 《정책변화》, 《로선변화》라고 하면서 이북이 누구의 《원조》나 외자를 도입하여 강성대국을 건설할 것이라는 설이 나돌았다. 이것은 이북의 정책과 력사에 대한 무지와 물리해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현철, 『“고난의 행군”을 락원의 행군으로』(평양: 평양출판사, 2002), 166쪽.

22) “물론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제국주의연합세력들의 고립압살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북한의 현실에서 그것들을 기대하기 힘들고 또한 막대한 외환을 주고 그들을 사들일 돈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속에서 살길은 자력갱생밖에 없다”. 김현환, “이북의 강성대국 건설방식(불가능+자력갱생=기적)”. 2009.01.01.

23) 고유환, “50년대식 발전전략으로 난관돌파 시도”, 『통일한국』1998년 11월호.

사에 대해 북한에 사과 요구를 한 남한에 대해서 ‘북한의 미사일 전력(戰力)’이 남한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논리를 강변하면서, 오히려 사과 대신에 추가적인 식량과 비료 지원을 요구했던 바가 있었다.

강성대국 건설을 지향한다는 북한이 남한에 대해 갖고 있는 전략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강성대국 건설을 국가 비전 혹은 통치 담론으로 내걸은 김정일 시대에 북한은 미국과 남한 사이, 국제 사회와 남한 사이를 철저히 분리시켜 남한을 고립시킨 뒤에 북한이 남북관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는 한편 최대한의 경제적 정치적 이득을 추구하는 방편으로 남한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 때 남한은 국제정치적으로 脫정치적, 脫진영적일 것이며, 그리하여 ‘민족끼리 패러다임’에 매우 적합한 존재여야 한다.

이러한 북한의 대남한 전략이 현실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아래에서 살펴 본다. 논의의 편의상 시기 구분은 크게 두 부분, 즉 2008년(이명박 정부 등장) 이전과 이후로 나누고, 다시 2008년 이전의 시기는 1998년(강성대국 건설노선 등장)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분석할 것이다.

IV. 2008년 이전의 북한의 내남한 노선 및 전략

1. 강성대국 건설노선 이전의 대남한 전략: 김영삼 정부 시기

1994년 김일성 사망 당시 북한은 모든 최악의 상황들이 한꺼번에 겹쳐서 북한에 쇄도하는 형국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 첫째, 핵무기 개발 의혹(제1차 북핵 위기)으로 인해 외부세계로부터의 비난과 국제적 고립에 직면하였고, 둘째, 내부 경제의 상황은 북한 역사상 최악의 상황에 위치하고 있었다. 셋째, 사회의 무질서와 체제 붕괴의 위기가 겹쳐서 최대의 위기 국면을 조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중첩된 위기 상황 속에서 당시 북한 지도부는 무엇보다도 체제 유지를 당면한 가장 최우선적 과제로 인식하였다. 김일성 사망으로 인한 통치 공백을 유혼통치를 통해서 보강하였다. 하지만 경제난과 안보난은 1995년에 ‘고난의 행군’ 시기를 선포하도록 만들었으며, 북한은 이 시기에 선군정치라

는 군사 중시 체제를 통해 체제의 위기를 막고 결속력을 강화시키는데 주력하였다.

한편, 유혼통치 시대의 북한의 대남한 전략은 내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하던 위기관리 전략의 일환으로서 추진하려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북한은 당시 제1차 북핵 위기를 배경으로 미국과의 핵 협상에 주력하는 한편, 당시 김영삼 정부에 대하여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을 구사하면서 남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제하는 전략을 선택하였다. 이로써 남북관계는 경색 국면에 존재하였다. 북한은 김영삼 정부를 전두환, 노태우 등과 동일한 군부 독재정권이라고 파악하였다.²⁴⁾ 김영삼 정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하여 북한은 남한을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공세적 압박 전략으로 일관하였다.

하지만 1995년 고난의 행군이 본격화되던 시기에 유엔에 구호를 요청한 북한은 마찬가지로 김영삼 정부에게 구호를 요청하였으며 초기 김영삼 정부는 이에 응답하여 즉각적으로 북한을 지원하였다.²⁵⁾ 김영삼 정부에 대한 북한의 이중적 태도(김영삼 정부의 남한은 압박해야 할 대상이자 대북 경제지원 국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은 우성호 억류 사건, 씨아팩스호 인공기 계양사건, 그리고 삼선비너스호 억류사건 등이 있다. 1995년 5월 30일 북한은 민간 어선 우성호를 포격 나포하여 1995년 12월 26일까지 억류하였다(3명 사망). 그리고 1995년 6월에 대북 지원에 나선 쌀 수송선 씨아팩스호에 대한 인공기를 강제로 계양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8월에는 쌀 지원 선박인 삼선비너스호가 북한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북한에 강제 억류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요컨대, 1995-98년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한의 대남한 전략은 공세적 압박 전략이 주류였으며, 핵문제를 비롯한 국제적 아젠더(agenda)뿐 아니라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남한을 당사자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이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국가로서의 기능을 계속적으로 수행

24) 김일성 사망 이전에는 북한은 김영삼 정부에 대해 공개적인 압박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1994년 6월 28일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예비회담이 있었고, 회담 결과 7월 25-29일에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을 결정하였다. 하지만 김일성이 사망함으로써 모든 것이 원상대로 되돌아갔다.

25) 1995년에 김영삼 정부는 쌀 15만 톤을 북한에 무상 지원하였다. 물론 이때부터 대북 퍼주기 논란이 사실상 가열되었다.

해 주는 존재이기를 원했다.

2. 강성대국 건설노선 이후의 대남한 전략: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 노선이 처음 제출된 것이 1998년이므로 이는 김대중 정부의 출범과 때를 같이한다. 따라서 이 시기부터 북한의 대남한 전략은 강성대국 건설 노선과 불가피하게 연관 관계를 갖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대북정책의 기조로 햇볕정책을 내걸었다. 하지만 북한은 햇볕정책을 강도 높게 비난하였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또 다른 형태의 ‘흡수 통일 정책’으로 인식하였고, 상호주의와 햇볕론에 대한 비난을 통해 김대중 정부가 과거 정권과 차이가 없음을 부각시켰다. 즉, “괴뢰들이 광고한 대북정책에서의 정경분리원칙은 빛좋은 개살구, 기만적인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²⁶⁾고 비판했으며, 상호주의에 대해서도 “전형적인 장사꾼의 논리, 철두철미 반민족적인 분열의 논리”²⁷⁾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대북 포용정책이란 조국통일 3대원칙의 이념과 전적으로 배치되는 반복 대결 정책”²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1998년의 동해 앞바다 북한 잠수정 사건 등에 직면해서 김대중 정부가 이전 정권과 달리 신중한 대응을 보이자 진의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가 국내의 비판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경분리 원칙 하에 금강산 관광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서 김대중 정부의 확고한 정경분리 정책을 확인하려고 했다.²⁹⁾

이에 북한은 내부적으로는 ‘민족대단결’을 내세우면서 금강산관광 사업을 위해 금강산 개방을 추진하는 등 ‘모기장식 개방’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대남한 비난 행위는 그대로 진행하였는데, 이는 남한의 정경분리 정책을 역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민간 수준에서 ‘돈이 되는 교류’와 경험 활성화를 표명하였다.³⁰⁾ 특히 2000년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일을 위해

26) 『로동신문』, 1998.07.22

27) 『로동신문』, 1998.05.23.

28) 1999년 2월 3일 평양에서 열린 ‘정부·정당·단체연합회의’에서 김용순 당중앙위 비서가 기조 보고에서 한 발언. 김충렬, “김정일 체제의 강성대국과 햇볕정책의 대응”, 『한국동북아논총』 제14집(2000), 13쪽에서 인용.

29) 김창희, “북한의 대외정책과 남북정상회담”, 『호남정치학회보』 제12집(2000), 10쪽.

서'라는 식으로 논리를 세우면서도 내심으로는 북한 자신이 직면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대남 관계에서 실리추구를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김대중 정부 시기 북한은 다음과 같이 대남한 전략을 추구하였다.

첫째, 북한은 6.15 정상회담 이후 한국을 대미 추종노선에서 이탈시켜 민족공조의 깃발 아래 남과 북이 단결하여 외세와 한민족 연합이 대결하는 구도를 만들려고 시도했다.³¹⁾ 이것은 이른바 남북한이 민족공조를 통해서 외세를 배격해야 한다는 전략이다. 이는 북핵 위기에서도 잘 나타난다. 북한은 핵 위기를 미국과 북한과의 갈등 구도가 아니라, 미국과 전조선 민족 간의 갈등구도로 규정하였고 수시로 민족공조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민족공조를 실제로는 북한의 주장을 남한이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거나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³²⁾

둘째, 북한은 북미 관계를 정권 안보와 체제 수호의 핵심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한과의 관계는 북미 관계가 요동할 때 이를 북한의 의도대로 이끌어 갈 수 있는 하나의 보조축(일종의 점화 촉진제)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셋째, 북한은 남한을 경제난과 식량난을 지원하는 대북 경제 지원용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남한은 북한에 계속적으로 경제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에게 원하는 것이 없어야 했다.

넷째, 북한은 지속적으로 남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북한에 유리한 한반도 정세를 구축하고, 한국의 국내정치에서 북한에 유리한 여론이 조성되도록 진보진영과 유대 강화에 주력하였고, 보수진영을 고립화시키려는 전략을 구사하였다.³³⁾

한편, 2003년에 출범한 노무현 정부 시기에 북한이 추구했던 대남한 노선 및 전략은 이전의 김대중 정부에 구사했던 노선과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볼

30) 이종석,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계간사상』(사회과학원, 2000), 116쪽.

31) 김철우,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평양: 평양출판사, 2000), 103-130쪽; 송승환, 『우리민족제 일주의와 조국통일』(평양: 평양출판사, 2004), 129-155쪽.

32) 전현준, 『북한의 대남정책특징』(서울: 통일연구원, 2002), 25쪽.

33) 기본적으로 북한은 6.15 이후 민족공조의 깃발 아래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한국 국내정치에서 보수 세력을 위축시키고, 민족 진영과의 연대 강화, 그리고 북한 지지 세력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수 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는 대북한 정책의 기초에 있어서 김대중 정부를 계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초 계승은 2006년 10월에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감행했을 때조차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되었다.

무엇보다 먼저, 남한은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국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었다. 남한은 계속해서 대북한 경제지원을 수행하였다. 남한의 경제 지원을 통해 북한은 내부 경제 문제를 완화시키는 것이 가능하였다. 반면에 남한은 경제지원을 하면서도 북핵 문제와 북한인권 문제 등에 대해서 북한에 제기하지 않았다. 사실상, 이 시기의 남한은 앞에서 언급한 ‘민족끼리 패러다임’의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만족시키고 있었다.

그리고 남한의 대북한 경제적 지원과 노무현 정부의 Two Tracks 정책(한반도 문제와 국제 문제의 분리)을 통해 협조적인 분위기로 변한 대남 관계를 통하여, 북한은 대미 관계에서도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었다.

북한은 이미 2004년에 이러한 대남 전략의 실행과 성취에 만족감을 나타내었다. 2004년 제13차 장관급회담에 참석한 북한 측 인사는 민족공조의 범위에 남한 정부를 포함시켜 민족공조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당국자 사이의 공조라는 것을 주장했으며, 정부 간의 공조를 높은 단계로 이끌어야 민간 수준의 공조를 추동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³⁴⁾ 이러한 전략은 2007년 2월과 3월에 20차 남북장관급회담 때에 지속되는데, 당시 북한 측이 강조했던 중점 사항들을 보면 당시 북한의 대남전략의 내용들을 엿볼 수 있다.³⁵⁾

앞에서 필자가 설정했던 북한의 대남한 인식 패러다임(민족끼리 패러다임)에 준해서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해 보자. 북한의 일방적 이슈 제안, 민족 문제와 국제 문제의 분리, 경제지원국으로서의 남한, 그리고 북한의 대내외정책 지지라는 네 가지 요소에 기초해서 검토해 볼 수 있겠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물론 양 정부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하지만)에

34) 최진욱, “북한의 민족공조론과 남북관계 10년”, 『김정일정권 10년: 변화와 전망』(서울: 통일연구원, 2004), 6쪽.

35) 1. 민족우선, 민족중시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를 취할 것. 2. 민족대단합 실현과 다방면적인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철폐하고, 올해 6.15 및 8.15 민족통일 대축전에 남북 당국이 지원하고 참가할 것. 3. 경협사업, 인도주의 협력사업, 적십자 회담의 실시. 통일부,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보고”, 2007.03.05.

북한은 남한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갖고자 했고, 실제로 가지고 있었던 '대북한 인내심'을 이용하여 남북 관계 및 대외 문제에서 이슈와 아젠더를 일방적으로 제안할 수 있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핵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북미간의 적대적 관계의 산물로 인식하였다.³⁶⁾ 따라서 북핵 문제를 남북한 및 한반도 문제로 전환시키는 노력을 상대적으로 경주하지 않았으며, 북한 내부의 인권 침해 문제를 주권 국가인 북한의 문제로 해석하여 개입하지 않고 묵인하였다. 결국 이것은 북한의 two tracks에 호응한 셈이 되었다. 게다가 핵 문제와 미사일 문제, 두 차례의 서해교전, 잠수함 침투사건 등에도 불구하고, 대북한 경제 지원을 지속함으로써 북한 측에서 볼 때, 남한은 경제지원국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별다른 동요 없이 지속적으로 담당하였다.

하지만 2008년 이후 이명박 정부가 등장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전변(全變)하였다. 북한의 '민족끼리 패러다임'에 규정되던 이상적인 남한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북한이 이상적으로 생각한 남한의 실종은 적어도 '시기적으로는'³⁷⁾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궤를 같이 한다.

V. 이명박 정부 이후 북한의 대남한 전략

1. 2008년 이후 북한의 국가 전략과 비전

북한은 1998년의 국민의 정부와 2003년의 참여 정부를 거치면서, 2008년에 남한에 등장하는 정권은 이전보다 더 북한에 우호적인 대북정책을 실시하는 정권을 기대했다. 2008년에 등장해야 할 북한에게 가장 바람직한 남한 정권은 어떤 정권인가. 북한의 핵실험과 핵 보유를 북미 간의 적대 관계의

36) 이러한 입장을 잘 보여주는 것은 임동원, 『피스메이커: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20년』(서울: 중앙books, 2008)이다. 임동원은 이 책에서 북핵 문제는 북미 적대관계의 산물이며 북미간 상호위협을 해소하고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관계를 정상화할 때 해결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입장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북핵에 대한 입장을 관통하는 것이다.

37) '시기적으로'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2008년 이래의 남북한 관계의 경색은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전이자 한국의 대선 이전 시기인 2007년 9월경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당시에 이미 북한에서는 박봉주 등이 물러나고 대남 강경파들의 포진이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산물로서 계속 이해하면서, 북한 핵보유와는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대북 경제 지원을 하고 남북한 간에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남한 정권이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일차적으로 2007년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2008년 초반부터 물거품이 되어 갔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북한이 원하던 이상적인 이미지의 남한의 존재와 민족끼리 패러다임은 그 실현이 좌초되기 시작했다. 2008년에 등장한 남한 정부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이슈를 제안하도록 방치하지 않았으며, 남북한 문제를 국제 문제와 결부시켰으며, 북한 핵문제와 북한 인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면하고 목소리를 내었다. 그리고 남한을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대북한 경제지원국으로서의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북한의 변화를 연동시켰다. 싫든 좋든 북한은 이제 남한에서 새로운 목표와 전략을 가진 정부의 등장에 적응하고 그에 대응해야 했다. 그에 대한 북한의 대응은 여러 방향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현시기 북한의 전반적인 국가 전략과 연관해서 살펴보아야만 알 수 있다.

현시기 북한의 국가 전략은 첫째, 북한의 내적 목표로서 내부적으로 개혁 및 개방을 실시하지 않은 채 특권경제(군경제와 당경제의 결합)³⁸⁾ 중심으로 체제를 운용하고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 그러한 목표가 최종적으로 달성되는 것(체제 유지에 더 이상의 불안정이 없는 것)은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게 되는 2012년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른바 “2012년 구상”의 실현이 그것이다.

지난 2008년 12월 천리마제강소연합기업소를 현지시찰하면서 김정일은 ‘강성대국 건설’을 완성하기 까지 이제 4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강조하였고, 강선의 노동자들이 다시 천리마를 탄 기세로 강성대국 건설의 대고조의 선봉에 서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것이 바로 “12월 호소”였다. 12월 호소는 대내적으로 인민동원을 위한 전략으로 전환되었는데, 그것의 현실에서 운동 형태는 2009년 4월부터 강성대국건설을 위해 실시된 ‘150일 전투’와 이를 뒤이어 연말까지 시행된 ‘100일 전투’였다. 김정일은 2009년 9월에 자강도 희천수력발전소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희천속도’(1년치 일을 한 달에 해치우는 속도전)를 발기하여 강성대국 건설을 재차 독려하였다. 2010년에도 김

38) 북한의 특권경제에 대해서는 차문석, “북한 경제의 동학과 잉여의 동산: 특권경제를 중심으로”, 평화문제연구소편, 『통일문제연구』, 제21권 1호(2009년)를 참조할 것.

정일은 이 발전소 공사현장을 3차례 방문하였다.

둘째, 이러한 내적인 목표를 이룩하고 보장하는데 필요한 조건인데, 바로 북한 자신이 핵무기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다.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전략적 행동으로서 북한은 2009년 5월 25일에 2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북한은 2차 핵실험이 내부적으로는 체제 유지와 대내 전열 재정비에 유리한 정세로 작용하였고, 또한 외부적으로는 미국과 한국 등에 강한 공격성을 보여줌으로써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는데 성공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강성대국과 관련해서는 그 기반과 토대를 놓았다고 평가했다.

셋째, 남한으로부터 계속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얻는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2차 핵실험으로 유엔결의 1874호가 취해졌으며, 당시 6자회담에서 북한은 나머지 다섯 개 국가가 북한을 압박하는 1:5의 수세적 상황에 직면했다.³⁹⁾ 주변국들이 공조하여 북한을 압박하게 되고 이에 중국마저 참가하게 되자 북한은 강성대국의 진입에 필요한 물질적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이것을 남한으로부터 긴급히 획득하고자 했다. 이때 남한은 이러한 북한의 의도에 불만을 토로하지 않아야 하며, 북한의 전략은 경제 지원을 하면서도 불만을 토로하지 않는 남한을 '만드는' 것이었다.

요컨대, 이러한 크게 세 가지의 국가 전략을 추구했던 북한은 대외 안보면에서는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승인되는 또는 묵시적으로 인정받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현존 체제를 유지하면서, '협력'에 의해서든 '협박'에 의해서든 남한을 위시한 외부 원조에 의해 존속되는 국가⁴⁰⁾를 추구하고 있다.

2. 2008-10년의 대남한 전략의 동학

논의를 다시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과 대남한 전략으로 되돌린다. 2010년 현재 북한은 강성대국의 마지막 요건으로 간주되는 경제 문제 해결(경제 강국의 건설)과 2012년의 강성대국 문턱을 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하지

39) 2차 북핵실험 이후 크게 분노한 중국은 유엔이 1874호 대북제재 결의안을 내놓자 즉각적으로 이에 참가해 대북제재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40) 박형중, "북한의 좌절과 도전(2007.10-2009.5)",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2009.05.20.

만 가장 커다란 문제는 북한을 기다려주는 시간이 너무나 짧다는 것이다.

2008년 이후 북한의 대남 전략은 크게 두 개의 서로 다른 성격의 시기[즉 공세기(攻勢期)와 수세기(守勢期)], 두 개의 서로 다른 성격의 시그널[하드 시그널(hard signal)과 소프트 시그널(soft signal)]⁴¹⁾로 나누어서 분석해 볼 수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 공세기에는 하드 시그널(압박, 공격 위협, 비방과 비난 등)을, 수세기에는 소프트 시그널(긴장 완화, 경협 재개, 인도적 문제 등)을 보낸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수세기에 보내는 소프트 시그널은 공세기에 보내는 하드 시그널을 간헐적으로 지속하는 가운데 함께 보낸다. 즉 수세기에는 두 갈래의 시그널이 동시에 남한에 들어온다.⁴²⁾

2008년, 자신이 바라던 모습이 아닌 남한 정부가 출현함으로써, 북한은 오히려 ‘민족끼리 패러다임’에 딱 맞는 이미지의 남한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것들을 시도했다. 일단 공세 위주로 대남한 정책을 바꾸면서 북한을 지원하지 않는 남한을 이전 정부처럼 대북 경제지원국으로 되돌아오도록 강제하였다.

그러면서 북한은 남한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는 정책도 병행했다. 하지만 남한은 6자회담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나라로부터 고립되지 않았고, 오히려 한미, 한중, 한일 관계를 밀접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로 북한이 고립에 빠지게 되었다. 2008년 이후의 이러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시기이다, 이 시기에 북한은 2008년 이후 핵실험(5월)과 미사일(4·7월)을 이용한 스펙터클을 2009년 7월에 마무리 하였고, 남한에 대해서 나름대로 강구할 수 있는 모든 공세적 압박을 마무리하였다. 경제력이 허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핵실험과 미사일발사까지 동원된 스펙터클이었다.

이 시기에는 남한에 대한 하드 시그널을 보내어 공세 분위기를 가져왔는데, 하드 시그널은 구두 협박을 통해서 실행되었다. 특히 2009년에 들어와서는 1.17군사협박과 1.30조평통 담화(전면 대결 태세 진입), 5.27협박(정전협정에 구애받지 않을 것) 등 하드 시그널을 계속해서 발송하였다.

41) 이 글에서 필자가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하드 시그널(hard signal)과 소프트 시그널(soft signal)은 공세적 시기에 표출하는 대남한 메시지(군사적 협박을 포함)와 수세적 시기에 표출하는 대남한 메시지(남북경협 중시, 이산가족 상봉 등)를 각각 의미한다.

42) 두 갈래의 시그널을 보내는 북한의 전략을 이른바 강온 전략을 구사한다고 평가하는데, 어찌되었든 이 전략은 여야로 구성된 남한의 의회에 긴장을 발생시킬 뿐 아니라 남한의 여론상으로도 찬반과 이해 및 오해와 갈등과 분열을 발생시킨다.

두 번째 시기이다. 이 시기는 대략 2009년 7월에 시작되었으며 이전까지의 북한의 대대적인 공세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남한이 북한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는데다가, 북한이 첫 번째 시기(공세기)에 감행했던 대대적인 공세적 압박이 유엔의 1874호 결의를 낳는 등 오히려 북한이 고립되고 압박당함에 따라 전세가 역전되었다. 이러한 대북 압박에 중국까지 가세하였다.

따라서 북한은 이 시기에 전략을 수정하여 소프트 시그널을 보내기 시작했다.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남한 내부에 북한에 대한 온정적인 여론을 형성하여, 만약 이명박 정부가 북한이 보낸 소프트 시그널을 받지 않을 경우, 남한 내에 존재하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을 증가시켜 남한 정부가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도록 하고 대북 지원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었다.

소프트 시그널로서 현대그룹 회장과 김정일 위원장의 면담, 김대중 전대통령 장례식에 고위급 조문단 파견과 이명박 대통령 접견, 이산가족 상봉 합의와 실행,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유화 조치(12.1조치의 폐지, 최저임금 5%인상 합의 등)의 시행 등이 취해졌다. 그러는 동안 북한은 남한뿐 아니라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에게도 대화를 제의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북한에 대한 1:5의 대결 구도를 1:1로 분산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이러한 소프트 시그널을 발송하면서도 하드 시그널을 간헐적으로 발송하였는데, 북한은 2009년 10월 17일에 미사일 5발을 발사하였고, 한국 해군의 NLL 침범을 거듭 경고하였다.

한편, 2009년 10월 14일에 조선중앙통신은 “화해, 협력의 실현은 북남관계 개선의 길”이라고 언급했다. 이산가족 상봉의 성과에 토대하여 “금강산, 개성관광을 재개하고 개성공업지구를 활성화하는 등 협력, 교류의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자”고 주장했다. 당시 북한은 남북교류 협력을 통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2012년이라는 목표 연도에 강성대국을 건설하려는 의도에서 남북관계 복원을 요구했다.⁴³⁾ 그러면서도 “북남 관계 문제는 민족 내부 문제로서 그 주인이며 담당자인 우리 민족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민족끼리 페러다임’을 계속 가동시키면서 그 페러다임에 남한을

43) 고유환, “한반도 정세 전망과 국면 전환 과제”, 『통일경제』 2009년 가을호, 11쪽.

다시 집어넣으려는 담론이었다.

2010년은 북한에게 강성대국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침단을 돌파하는 해로 설정되어 있다. 이를 위해서는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2010년에 북한은 6월에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였고, 9월 28일에는 조선노동당 제3차 당대표자회를 개최하여 김정은 후계 작업을 본격화했다.

2010년에도 북한은 대남한 행동 전략을 하드 시그널 일변도의 공세 전략이었다. 북한은 6.25전쟁 이래 가장 공세적이고 비극적으로 남한을 압박하였다. 3월 26일에는 서해해상에서 46명의 남한 해병이 전사하는 초계함 천안함 피격 사건을 일으켰으며, 7월에서 9월을 경과하면서 어선 나포, 해안포 사격, 핵억지력 위협 및 전쟁 위협 등을 통해 긴장 국면을 조성하였다. 강성대국 건설에서 제기되는 국내외의 문제(강성대국을 맞이하게 될 후계체제 구축 문제, 내부의 정치경제적 불안정 문제, 남한을 포함한 외부의 경제지원 문제 등)가 이러한 도발위주의 대남한 전략과 연동되었을 것이다.

11월 23일에 감행한 연평도 포격 사건은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에서 2010년의 대내외 시공간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왜냐하면 북한은 2012년까지 국제사회의 비난과 규탄 속에서 ‘강성대국의 모든 전선에서 침단을 돌파’해야 하는 것이다.

의회민주주의 체제인 남한에서의 정권 교체는 대북한 정책에서의 성격 변화도 가져오곤 한다. 지금까지 남북한 관계를 보았을 때, 남한의 대북한 정책의 성격 변화가 북한의 대남한 전략의 변화를 가져오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다소간 확실한 것은 북한의 대남한 전략의 기본 패러다임(민족끼리 패러다임)에 적합하게 남한이 행동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북한은 남한에 대한 행동 패턴을 결정해 왔다고 표현하는 것이 옳다.⁴⁴⁾ 2010년 12월 현재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을 뼈저리게 경험한 남한은 북한이 생각하는 이상형으로부터 더욱 더 멀어지고 있다.

44) 이러한 점은 이명박 정부를 포함해서 남한의 역대 정부들이 대북한 정책의 목표를 ‘북한의 유의미한 변화’(국제사회의 규칙을 준수하는 모든 국가와 평화롭게 공존하는 정상 국가로의 변화)로 상정해 왔지만, 모두 근본적이고도 결정적인 한계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남한정부와 그 대북정책이 ‘민족끼리 패러다임’에 부합하면 남한에 대한 공세적 도발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없게 되고, 그 패러다임에 부합하지 않을 때는 대남한 공세적 도발이 발생하는 메커니즘 속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유의미한 변화’라는 것은 그냥 남한의 희망적 사고에 불과해 왔다.

참고문헌

- 강 성. (2004). 「4대제일주의: 사회주의 조선의 기상, 21세기 강성대국건설의 영원한 구호」. 평양: 평양출판사.
- 개번 맥코맥. (2006). 「범죄국가, 북한, 그리고 미국」. 서울: 이카루스미디어.
- 고유환. (1998). 50년대식 발전전략으로 난관돌파 시도. 「통일한국」, 1998년 11월.
- _____. (1999). 북한의 권력구조 개편과 김정일정권의 발전전략. 「국제정치논총」, 38(3)
- _____. (2009). 한반도 정세 전망과 국면 전환 과제. 「통일경제」, 가을호.
- 김근식·이무철. (2007). 북한의 선군 정치와 강성대국론: 자료 해제와 연구 동향. 「통일문제연구」, 48
- 김원삼·최순옥. (2004). 「4대제일주의는 강성대국 건설의 영원한 구호」.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김창희. (2001). 김정일 체제의 국가관리정책과 발전전략. 「한국동북아논총」, 20.
- _____. (2000). 북한의 대외정책과 남북정상회담. 「호남정치학회보」, 12.
- 김철우. (2000).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 평양: 평양출판사.
- 김충렬. (2000). 김정일 체제의 강성대국과 햇볕정책의 대응. 「한국동북아논총」, 14.
- 박형중. (2009). 북한의 좌절과 도전. 「통일연구원」
- 송승환. (2004). 「우리민족제일주의와 조국통일」. 평양: 평양출판사.
- 윤현철. (2002). 「“고난의 행군”을 락원의 행군으로」. 평양: 평양출판사.
- 이종석. (2000).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계간사상」, 사회과학원.
- 임동원. (2008). 「피스메이커: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20년」. 서울: 중앙books.
- 전현준. (2002). 「북한의 대남정책특징」. 서울: 통일연구원.
- 차문석. (2009). 북한 경제의 동학과 잉여의 동선: 특권경제를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21(1)
- 최진옥. (2004). 북한의 민족공조론과 남북관계 10년. 「김정일정권 10년: 변화와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 통일부. (2007).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보고」
- 『로동신문』 1998.05.23/ 1998.05.26/ 1998.07.22/ 1998.08.22/2000.01.01/ 2000.11.18/
2001.01.01/ 2001.01.09/ 2007.05.24.
- 『조선문학』 2002년 3월호.
- 『조선신보』 2009.09.24.

차문석(車文碩): 성균관대학교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비교사회주의, 사회주의 공장 및 노동체제, 북한사회 등이다. 주요 저서로는 『반노동의 유토피아』(2001), 『노동의 세기』(2001, 공저), 『북한의 사회』(2006, 공저), 『대중독재의 영웅만들기』(2005, 공저)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뉴딜, 세련의 드라마』(2009), 『악의 축의 발명』(2005, 공역) 등이 있다. 논문으로는 “선군시대 경제노선의 형성과 좌표”(2007), “북중관계의 역사와 현재”(2006), “신의주공장 연구”(2005), “고난의 행군과 북한경제의 성격변화”(2005) 등이 있다(mmdy97@hanmail.net).